



**정부는 행정통합 초기 필수소요 지원을 위해 추경 예산에 지방채를 인수하는 예산으로 1,000억원을 반영하였고, 교부세·교육교부금도 증액 교부하였습니다.**

<보도내용>

- 2026.4.20.(월) 세계일보는 「전남·광주 행정통합 비용 최소 1,873억 추산」 제하의 기사에서 “전남도와 광주시의 최소 행정통합 비용이 1,8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.”고 하면서,
  - “최근 추가경정예산에서 전남·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국고 지원분 573억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한해 5조원씩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한 중앙정부가 최소한의 통합비용 지원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”, “전남·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재정부담은 통합시가 떠안을 가능성이 커졌다.”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.

<정부 입장>

- 최근 추가경정예산에서 전남·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국고 지원분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.
  - 정부는 금번 추경예산에 전남·광주 행정통합 초기 필수소요 지원을 위해 전남·광주가 발행하는 지방채를 인수하는 예산으로 1,0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. 또한, 초과세수와 연동하여 지방교부세·교육교부금\*도 증액 교부하였습니다.

\* 전남·광주 지역에 추가 지원하는 지방교부세·교육교부금

- 지방교부세(보통): +6,647억원(전남 5,781억원, 광주 866억원)
- 지방교육재정교부금(보통): +3,971억원(전남 2,549억원, 광주 1,423억원)

□ 아울러, 정부는 내년도 예산부터 통합 지방정부의 초기 안착 지원을 위해 연간 최대 5조원,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 인센티브를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며,

○ 현재 ‘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’를 통해 세부 지원 방안을 논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.

담당 부서	예산실 지방재정팀	책임자	팀 장	박민정 (044-214-3190)
		담당자	사무관	고병국 (kobk22@korea.kr)

